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10-11월호

*임팩트온의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는 매월 분야별 ESG 트렌드를 주제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입니다.

임팩트온 www.impacton.net

조사 및 작성

01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임팩트온 송선우 에디터
02 반도체/IT/철강/조선	임팩트온 이재영 에디터
03 자동차	임팩트온 홍명표 에디터
04 기후테크 및 순환경제	임팩트온 송준호 에디터
05 공시 및 ESG 리스크	임팩트온 박란희 편집장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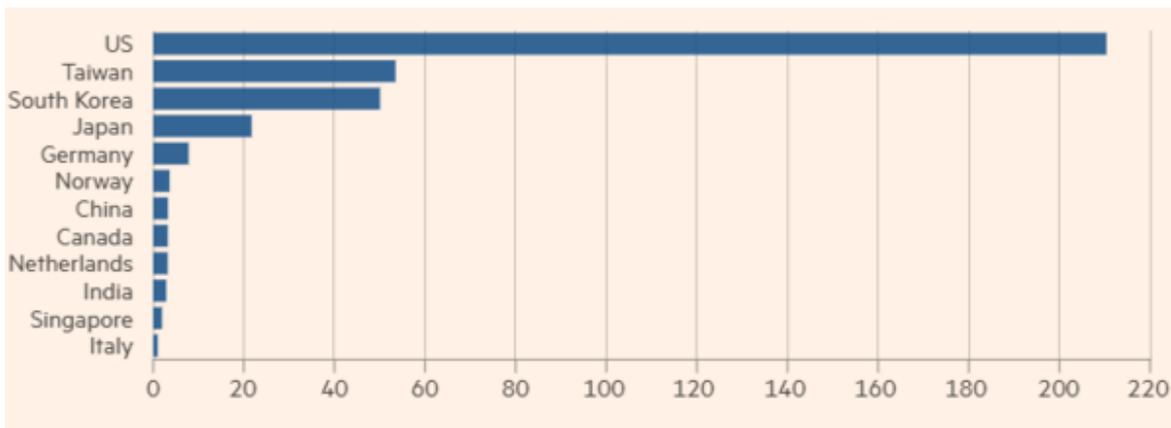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01.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Key Takeaways

- 한국 배터리 산업은 IRA 보조금을 통해 약 500억 달러의 수혜를 입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축소 가능성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공화당 내 일부는 IRA 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정책 지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와 국제 협력을 통해 탄소포집 및 저장(CCS)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COP29에서도 중동의 CCS 확대를 위한 강력한 로비 활동이 이뤄지며 국제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유럽의 정책 지원으로 SAF 산업이 성장 중이나, 정책 불확실성과 국제 경쟁 심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보조금 철폐와 신흥국의 저가생산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

IRA의 미래는? 미국 정책 변화에 한국 배터리 산업 주목



IRA정책의 수혜국 순위/FT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분배를 서두르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약 30억달러(약 4조2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이 승인되었으며, 전체 IRA 계획 자금의 약 88%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11월 기준). 자금 지원은 주로 친환경 에너지, 전력망, 배터리 부문에 집중됐다.

특히,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약 75억4000만달러(약 10조5000억원)의 조건부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는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위치한

리튬이온 배터리 셀 및 모듈 제조 공장 두 곳의 설립을 지원하며, 연간 약 67기가와트시(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은 대만에 이어 IRA 정책의 두 번째로 큰 수혜국으로 평가됐다. 2022년 이후 한국은 IRA 정책을 통해 약 500억달러(약 70조8050억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된 후, 그의 측근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IRA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약 75%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분배되었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IRA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앤드루 가바리노 의원 등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은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 폐지에 반대하는 서한을 하원의장에게 전달했다.

☞ [바이든 행정부, 삼성SDI·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법인에 10조5000억원 대출지원](#)

탄소포집 부문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중동



사우디 아라비아 에너지 부와 MOU를 맺은 탄소포집 스타트업 Carbon Cure

중동이 탄소포집(Carbon Capture and Storage-CCS) 분야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CCS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독일의 린데(Linde) 및 미국의 SLB와 협력해, 사우디 동부 주베일 지역에 연간 9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대규모 CCS 시설을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UAE의 국영 에너지 기업 ADNOC(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도 자국 내 CCS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다. ADNOC은

현재 연간 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알 레야다(Al Reyadah)' 시설을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탄소포집용량을 5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11월에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중동 국가들의 CCS 확대를 위한 로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약 500명의 로비스트가 참가했으며, 이들은 ADNOC과 사우디 아람코 등 주요 중동 에너지 기업들의 CCS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촉구했다. ADNOC은 자사의 CCS 기술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를 이끄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중동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아람코·린데·SLB, CCS 계약...美 에어룸, 2100억원 투자유치](#)

SAF 산업, 기업 투자와 정책 지원 속 성장… 그러나 불확실성도 상존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산업이 금융기업들과 석유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각국 정책 지원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다.

BP, 셸(Shell), 셰브론(Chevron),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등 글로벌 석유기업들은 바이오 연료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수소처리식물성오일(HVO)과 SAF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루 28만6000배럴의 생산량이 확보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블랙록(BlackRock), 삼사라(Samsara) 등 글로벌 금융기업들은 '지속가능 항공 구매자 연합(SABA)'을 통해 SAF 인증서를 대규모로 구매하며 SAF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독일은 탄소배출권 이월 제한 정책을 통해 항공업계의 배출권 의존도 감축과 친환경연료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걸림돌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축소와 청정연료 세액공제 정책 지연으로 SAF 생산시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SAF 생산량 30억 갤런을 달성하겠다는 바이든 정권의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브라질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 [석유 메이저, 바이오연료 대규모 투자…2030년까지 43개 프로젝트 추진](#)

☞ [블랙록 등, SAF 인증서 구매…지속가능 항공 구매자 연합\(SABA\) 참여](#)

☞ [美청정연료 세액공제 지침, 연내 확정 안돼...SAF 사업 주춤](#)

Editor's Comment:

최근 에너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중동의 경우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부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02. 반도체/IT/철강/조선

Key Takeaways

-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다.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막대한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AI붐이 유틸리티 기업들의 기후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 폐쇄가 지연되고 재생에너지 계획이 재조정되고 있다.
- 유럽의 철강 탈탄소화가 지연되고 있다. 유럽 주요 철강기업들이 고비용, 규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녹색철강 투자를 연기했다.

트럼프 측, 반도체법 보조금 검토 시사… SK, 삼성전자, 미국 정치권 동향에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도체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반도체법은 2022년 8월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투자를 확정, 삼성전자는 최대 64억달러(약 9조1865억원),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달러(약 6459억원)의 보조금, 투자금의 최대 25%에 달하는 세제 혜택 등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진 상태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현지시각) 트럼프의 측근 비벡 라마스وام이(Vivek Ramaswamy)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마스وام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라마스وام이는 X(구 트위터)에서 임기 종료 전에 반도체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계약들을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면밀히 조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벡 라마스وام이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했다. / 비벡 라마스وام이 X 계정

실제로 트럼프는 10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반도체법은 정말 나쁜 거래”,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에게 공장을 지으라고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높은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보조금이 없다면 투자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라마스와미의 발언 다음날인 11월 27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날 대비 3.43%, SK하이닉스는 4.97% 하락했다.

한편 현재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0월에는 법안 적용 대상을 확대, 태양광 웨이퍼 생산자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며, 12월 5일(현지시각) 기준 23개 기업, 35개 프로젝트에 걸쳐 331억4750만달러(약 47조5799억원)의 보조금과 약 162억달러(약 23조2534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다만 실질 지급은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반도체 제조 세액공제에 태양광 웨이퍼 포함...계속되는 중국 견제](#)

유틸리티 기업, 데이터센터 급증과 트럼프 복귀에 친환경 전환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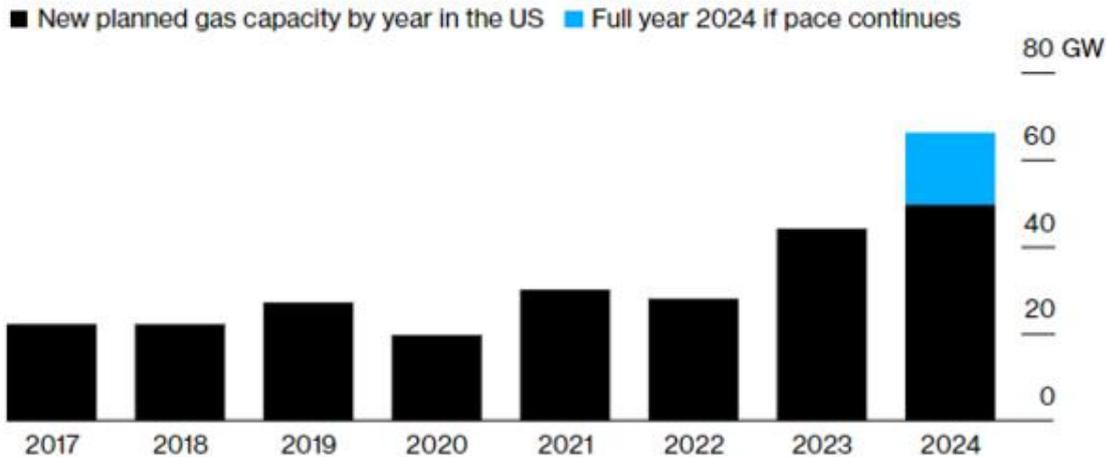
AI가 전력, 가스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업계의 기후 목표 진전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빅테크 중 하나인 아마존은 올해 3월 향후 15년 동안 폭증하는 AI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확장에 1500억달러(약 215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유틸리티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서던 컴퍼니(Southern Co.), 듀크 에너지(Duke Energy Corp),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 Inc.) 등 미국의 주요 전력기업들은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 최대 송전 시스템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EP) 또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변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AEP가 전력을 공급하는 11개 주 중 10개 주가 공화당 우세주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유틸리티 기업들의 기후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 분야 컨설팅기업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는 지난 11월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다면 미국 에너지 정책은 탈탄소화 목표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현재까지 2200억달러(약 315조원) 이상의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공화당 우세주에 집중된 만큼, 특히 태양광 부문 제조업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US Gas-Power Plans Shoot Up This Year

In first three quarters, new plans have surpassed all of 2023



Source: Sierra Club

Note: Shows planned gas capacity that was first planned in each year. Includes coal to gas conversions and new gas units; excludes upgrades at existing gas plants. Data as of Oct. 1, 2024.

2024년 10월 1일 기준, 올해 3분기 신규 가스 발전 용량 계획이 2023년 전체를 초과했다. / Sierra Club

재생에너지 기업 오스테드 또한 지난 9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I 기반 전력 수요가 해상 풍력 기반 재생에너지로 넘어오지 않고 있다"며 미국 내 신생 해상 풍력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데이터센터와 AI혁명이 미국 전력망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추가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유틸리티 업계와 데이터센터와의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 주요 유틸리티 회사들, 기후 목표 변경 또는 연기](#)

글로벌 녹색철강 전환, 중국은 '가속', 유럽은 '난항'

중국이 글로벌 철강업계의 녹색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11월 1일\(현지시각\) 중국 국무원 산하 공업정보화부\(MIIT\)](#)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및 저탄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도형 철강 기업은 코크스를 사용하는 기존의 고로(용광로) 등 탄소집약적 설비를 단계적으로 폐지, 전기로(EAF) 기반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달성해야 하며, 제품 전 과정 평가(LCA), 환경제품선언(EPD) 등을 도입, 철강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선도형 규범 기업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

钢铁行业规范条件（2024年修订）

（征求意见稿）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深入贯彻党的二十大精神，落实全国新型工业化推进大会部署要求，促进钢铁行业高质量发展，结合行业发展新形势新要求，对《钢铁行业规范条件（2015年修订）》和《钢铁行业规范企业管理办法》（工业和信息化部2015年第35号公告）进行修订，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依法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港澳台地区除外）设立、具备独立法人资格的钢铁企业，包括长流程企业、短流程企业。长流程企业是指同时具备炼铁（高炉、非高炉、RKEF等）、炼钢、轧钢等生产工序的钢铁企业；短流程企业是指具备炼钢、轧钢等生产工序，以废钢、直接还原铁、镍铁等为原料，以电炉作为冶炼装备的钢铁企业。同时具备长流程和短流程生产工序的钢铁企业按长流程企业计。

第三条 本办法对钢铁企业实施“规范企业”和“引领型规范企业”两级评价。

第四条 本办法是引导性文件，按照企业自愿原则申请，不具有行政审批的前置性和强制性。

第二章 基础指标

第五条 基础指标是评价“规范企业”的依据，包含守法经

1

철강업계 규범조건(2024년 개정) / 공업정보화부(MIIT)

중국과 달리 유럽 철강업계의 녹색전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세계 2위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은 유럽연합(EU)의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녹색 투자 계획을 연기했다. 2023년 1월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8억5000만유로(약 1조2853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2030년까지 17억유로(약 2조5706억원)의 탈탄소화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성명에서 “시장 상황이 어렵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적 불확실성이 있다”며 최종 투자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독일 철강기업 티센크루프(Thyssenkrupp) 또한 비용 증가와 시장 여건 변화로 인해 자사의 녹색 철강 생산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무역 방어 조치를 포함한 저탄소 조달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인센티브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글로벌 톱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 녹색철강 투자 계획 연기](#)

[☞ 중국,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2만원…CBAM 대응에 만전](#)

Editor's Comment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서 미국 내 에너지 정책은 물론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 투자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주에 집중된 만큼, 완전한 폐지는 어렵겠지만 그 규모나 전략적 방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녹색전환이 난관에 부딪힌 서구세계와 달리, 중국은 국가 주도적 전략으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하고 있다. 향후 친환경 첨단 산업 선도국가가 누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03. 자동차

Key Takeaways

- 지난 10~11월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세계적으로 판매 호조를 보인 기간이었다.
- 중국 브랜드의 강세가 여전히 계속됐다. 대표주자 BYD는 1000만 대 생산 돌파를 기록했고, 유통버스 브랜드는 흑서와 흑한에 견디는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다.
- 배터리 관련 뉴스가 많은 시기였다. 중국의 CATL은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다. 베트남의 빈패스트는 전기차 제작 뿐 아니라 배터리까지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중국 브랜드 초강세, 테슬라는 부진

지난 10~11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뉴스가 이어져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BYD를 비롯한 중국 제조업체들의 질주는 계속됐고, 배터리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이어졌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로 구동하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최대 8%에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은 가솔린 가격이 국내보다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전기차 보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다. 그러나 전기차 전문 미디어 EV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2023년 2분기 대비 미국 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플러그인 차량의 판매량이 22% 증가했다. 클린테크니카의 10월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 글로벌 플러그인 차량 등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해 150만 대에 달했다. 이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약 50만 대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00만 대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가 차지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현대 모비스가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V리포트에 따르면, 현대 모비스는 체코와 스페인에 이어 유럽 세 번째 전기차 허브인 슬로바키아 노바키 지역에 최초의 PE 시스템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PE 시스템은 인버터, 컨버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구성된다.

☞ [중국 BYD 내년에 1000만원대 전기차...중국 전기차에 몸살 앓는 유럽 자동차 업계](#)

☞ [유럽 자동차기업들, 중국산에 대항하는 2000만원대 저렴한 전기차 출시](#)

☞ [中 BYD, 분기 매출 테슬라 첫 추월](#)

중국 전기차 견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 진행 중 테슬라는 로보택시 감각 공개해서 부진 만회하려는 듯

유럽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강한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는 당초 10월 초 예정되었던 디젤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했다. 동시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승인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던 테슬라가 6년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독일에서는 BMW와 폭스바겐, 영국에서는 MG에 판매량이 추월당하는 등 경쟁 심화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응해 테슬라는 10월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 로보택시가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표는 주목받았다. 머스크는 2024년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며, 2026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가격을 3만달러(약 4210만원) 미만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월 1주차 해외 ESG 핫클립](#)

☞ [JP모건,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테슬라에 찬물... “실질적인 수익 창출 못할 것”](#)

배터리 관련 뉴스가 많았던 기간....빈패스트는 배터리와 시장 확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 소식이 이어졌다. LG화학은 포스텍 이민아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배터리 열 폭주 억제 기술을 개발했으며,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9월호에 게재됐다. 대만의 프롤로지움(ProLogium)은 에너지 밀도와 고속 충전 기능이 강화된 100% 실리콘 음극 배터리를 공개하며, 독일 TÜV 라인란트 인증을 획득했다.

미국에서는 라이트(Lyten)이 네바다주에 세계 최초의 리튬-황 배터리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라이트의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최대 40% 가볍고, 에너지 밀도는 2배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를 두 배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배터리는 미국산 재료로만 제작돼 수입 원자재 의존도를 낮췄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도 치열했다. 스텔란티스는 전고체 배터리 차량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혼다는 자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 중이라는 소식이 11월 말 전해졌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은 10월 프리보이(Freevoy)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출시하며, 10분 충전으로 28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또한, CATL은 2세대 나트륨 배터리를 2025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BYD는 11월 말 1000만 번째 전기차를 출고하며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입증했다. 또 다른 중국 업체 유통(Yutong) 버스는 호주에서 배터리 내구성과 주행 거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흑한의 카자흐스탄에서도 -25°C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선보였다.

한편, 베트남의 빈패스트는 UAE에 첫 대리점을 열며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다. 빈패스트는 또한 LFP 기술을 보유한 고션(Gotion High-Tech), 프롤로지움(ProLogium), 스토어닷(StoreDot)과 협력하며 배터리 기술 최적화를 추진 중이다. 빈그룹과 팜낫부엡 회장은 나스닥 상장 빈패스트를 위해 총 85조 동(약 4조6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빈패스트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 [대만 에너지기업 프롤로지움\(ProLogium\), 세계 최초 100% 실리콘 양극 배터리 공개](#)

☞ [미국 라이튼\(Lyten\), 세계 최초의 리튬-황 기가팩토리 건설 발표](#)

☞ [CATL, 초고속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 출시...전기차 배터리 혁신 이끌어](#)

☞ [CATL, 2세대 나트륨 배터리 발표... "2025년 출시 예정"](#)

Editor's Comment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의 질주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유통버스라는 새로운 강자까지 등장했고 테슬라는 모국에서도 추락하기 시작했다.

테슬라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로보택시를 공개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대로 실용화된다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04. 기후테크 및 순환경제

Key Takeaways

-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석유업계는 산유국들과 같은 입장으로 협상을 앞두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확대해 실적 쌓기에 나섰다.
- 유럽의 패션 및 소비재 기업들이 EU의 섬유 폐기물 분리수거 의무화와 에코디자인 규정 등 산업과 직접 연관된 규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운 패딩 업계는 소재 선택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규제 대응을 넘어 가치 소비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물 문제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물경제위원회(GCEW), 세계자연기금(WWF)은 물이 세계 경제에 미칠 피해를 산정하여 공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물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일본의 산토리와 같은 기업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UN 플라스틱 협약 결렬...재활용 사업 실적내는 기업들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UN 협상이 참여한 대립 속에 결렬됐다. 부산에서 열린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2일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으나, 새 플라스틱의 생산 제한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00여 개국이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주장한 반면, 일부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가 발표한 중재안은 각 진영의 요구사항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 르완다 환경관리국장 줄리엣 카베라는 "자발적 조치에 의존하는 협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사우디 대표 압둘라만 알그와이즈는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특정 조항이 자국의 입장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결국 협상은 내년 'INC-5.2' 회의로 연기됐다.

석유화학 업계는 산유국들과 같은 입장이며,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실적 쌓기에 나섰다. 세계 최대 석유화학기업 엑손모빌도 협상을 앞두고 미국 텍사스주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 2억달러(약 2800억원) 투자를 발표했다. 엑손모빌은 2022년부터 베이타운 공장에서만 3만17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45만톤의 재활용 용량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과 분류를 위해 '사이클릭스'라는 합작회사도 설립하는 등 재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해결이라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성장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비밀 연구소 X는 11월 15일(현지시각) AI 기반 플라스틱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X의 레이 바나타오 디렉터는 "초분광 이미징 기술로 1분에 수천 개의 플라스틱을 분자 단위까지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며 "20년 걸리는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개발한 X가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기술로 영역을 확장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구글X는 초분광 이미징 기술을 플라스틱 폐기물 산업에 접목했다. X는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미국 폐기물 관리업체 리콜로지(Recology)와 협력해왔다. 연구진들은 식품용기 등 재활용이 까다로운 제품을 분석했고, 적외선 스캐너로 가정 쓰레기를 직접 측정하며 연구를 진행했다./구글X

[UN 플라스틱 협약, 합의 실패...부산 협상 폐막](#)

[엑손모빌, 텍사스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 2800억 투자...캘리포니아 소송 때문?](#)

[구글 X랩, AI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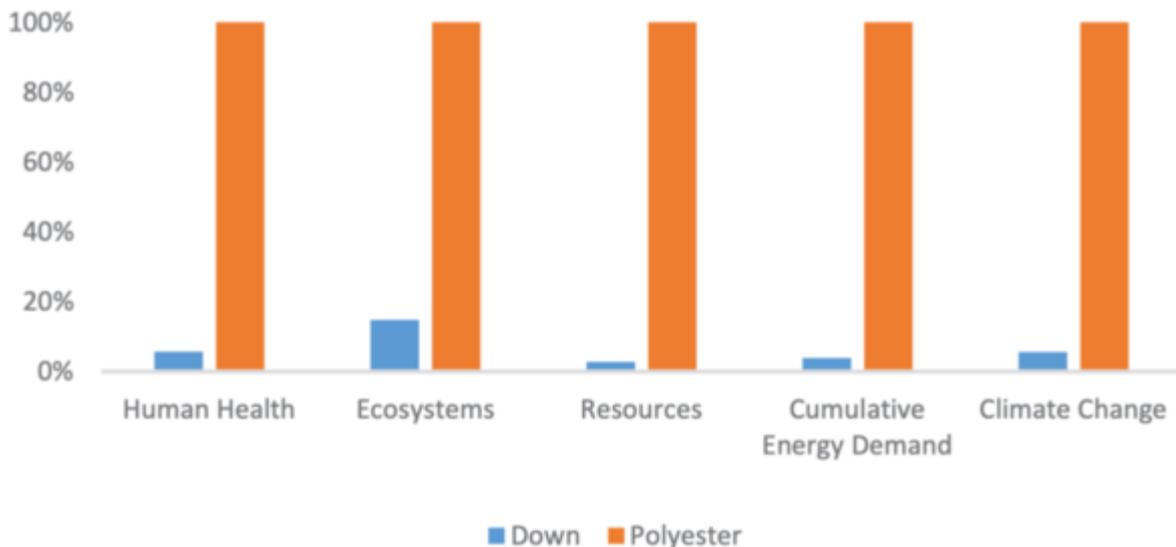
규제 넘어 가치 대응...유럽 기업들의 '플라스틱·다운 전쟁'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섬유 폐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자, 유럽 패션업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라, H&M, 망고 등 10개 대형 패션 브랜드는 내년 4월부터 스페인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패션 브랜드 망고의 안드레스 페르난데즈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규정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지만, 법적 요구사항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소비재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유니레버는 지난 3년간 재료과학 투자를 4배로 늘리고, 650명의 패키징 전문가와 60명의 재료과학자를 고용했다. 유니레버는 2021년부터 3000가 넘는 소재를 연구해 왔으며, 재활용 플라스틱 공급업체를 2개에서 60개로 확대했다고도 밝혔다. 유니레버 글로벌 패키징 책임자 파블로 코스타는 "샴푸 바, 시트 세제 등 새로운 제품 형식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U의 규제를 넘어 가치 소비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H&M은 동물권 단체 PETA의 압박으로 2025년 말까지 버진 다운 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H&M의 다운 제품 90%는 이미 소비자들이 사용한 이불, 베개, 재킷에서 재활용된 것이다. PETA는 15만 통의 소비자 서한과 주주행동주의로 H&M을 압박해 왔으며, 현재 룰루레몬, 마크스앤스펜서 등 다른 패션 브랜드들에도 깃털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 다운 및 페더연합(IDFB)은 "다운이 폴리에스테르 충전재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2% 낮고 환경 영향이 18배 적다"고 주장했다. 대체재로 주목받는 합성 소재도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파타고니아는 2025년까지 버진 석유화학 소재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고, 일부 기업들은 꽃 기반 충전재인 '플러다운' 같은 혁신 소재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 다운 및 페더연합(IDFB)은 폴리에스테르 충전재가 다운 소재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IDFB

다운을 사용할 경우, 패션 브랜드들은 동물 복지 활동가들의 주주 행동주의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 합성섬유를 포함한 미세섬유 플라스틱 오염의 경우, 싱크탱크인 플래닛 트래커(Planet Tracker)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소송의 위험이 있다. 플래닛 트래커의 소재 분석가인 마르시안 리는 "동물 기반, 화석 기반, 식물 기반 옵션 중 어느 것이 가장 위험이 낮은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활용 재료가 일반적으로 버진 재료보다 더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기업의 선택에 관계없이 (PETA vs. 반플라스틱 vs. 농업 옹호자 vs. 기타 환경 운동가 등) 누군가는 반드시 화를 낼 것"이라며 "결국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옵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자라, H&M 포함한 10개 패션브랜드, EU 섬유 폐기물 수거 규정 대비 시범 프로젝트 진행](#)

☞ [유니레버의 패키징 R&D...3000개 이상 재료 연구한 결과는?](#)

☞ [H&M 2025년 재활용 다운패딩 발표에, 왜 다운 산업은 반발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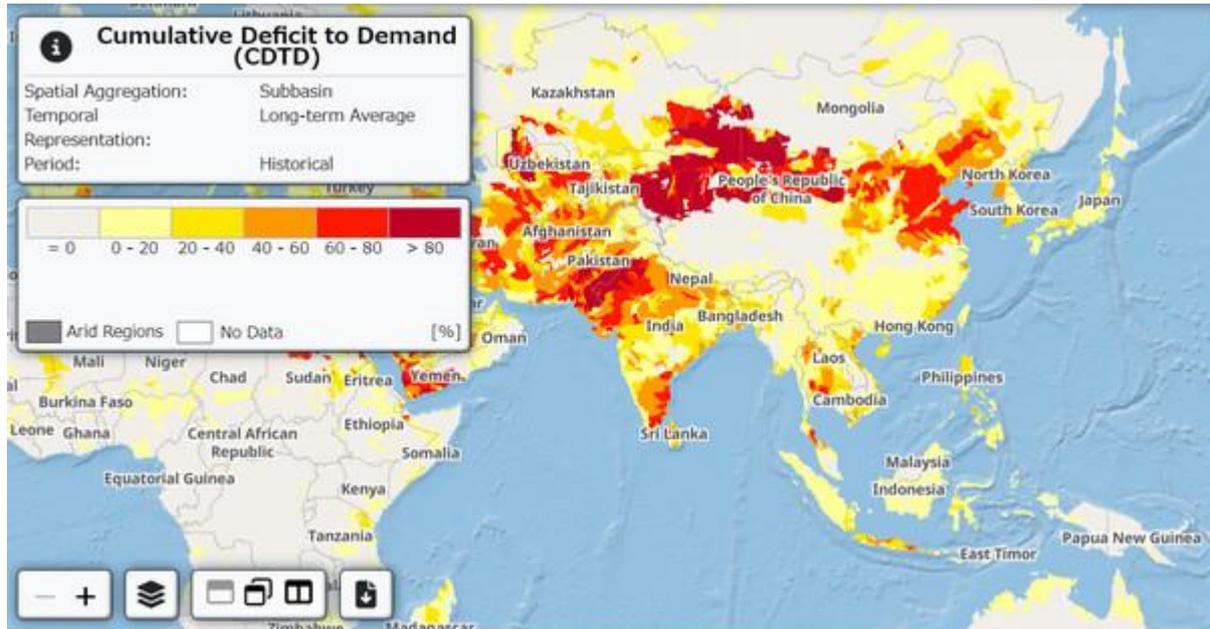
지구촌 물 위기 '비상등'... 2050년 세계 경제 8% 감소

전 세계 강의 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0월 7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 수자원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시시피강과 아마존강이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강 유역의 절반 이상이 평년보다 낮은 유출량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600기가톤의 빙하가 녹아내려 50년간의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WMO 수문학 부장 슈테판 올렌브룩은 "올해는 물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빙하가 몇십 년 후에 사라지면 상황은 매우 극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물경제위원회(GCEW)는 이 같은 물 위기가 205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을 최소 8% 감소시키고,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절반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GCEW의 요한 룩스트림 공동의장은 "물은 기후 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한 사람이 적절한 영양 섭취와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하루 4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알려진 50~100리터보다 40배나 많은 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식음료 기업 산토리가 세계 최초로 물 부족 위험을 예측하는 '물 안보 나침반'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도쿄대학, 니폰 코에이와 협력해 개발한 이 온라인 도구는 전 세계 각 지역의 물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특히 농업용, 산업용, 가정용 등 용도별로 물 부족 위험을 색상 코드로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산토리의 이번 도전은 기업들의 물 위기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물 위기가 식량 안보, 복지, 환경에 연간 58조달러(약 8경원) 규모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투자자들도 기업들에 물 리스크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따르면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물 관련 데이터 공개를 요청받았다.



산토리가 미래의 물 부족 위험을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 도구인 '물 안보 나침반'을 출시했다. /산토리

☞ [세계기상기구\(WMO\) 보고서, 30년 만에 강수위 가장 낮아져](#)

☞ [“물은 기후 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GCEW, 세계 최대 규모 연구 결과 발표](#)

☞ [일 식음료기업 산토리, 세계 최초 물 리스크 평가를 위한 '물 안보 나침반' 출시](#)

Editor's Comment:

플라스틱 생산과 재활용의 이분법적 대결은 영속되지 않는다. 유니레버와 같은 소비자 기업이 신소재 개발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화학 기업이 새 플라스틱 생산을 유지하는 전략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다운 패딩 업계는 벌써 동물 기반, 화석 기반, 식물 기반 옵션 중에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해야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의 기로에 섰다. 규제는 물론 가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05. 공시 및 ESG 리스크

Key Takeaways

- COP29(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글로벌 탄소시장에 관한 규칙인 제6조가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국제 배출권 및 탄소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 ESG의 소셜(S) 이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ISFD)가 공식 출범했다. 기업 인권 관리는 CSDDD 규제와 함께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상장 실패, 벌금 등 다양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 EU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차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CSRD, CSDDD, CBAM 등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며, 산림전용방지법(EUDR)의 시행을 12개월 연기했다. 반면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 EU 내 평가기관은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영국도 2025년 상반기에 유사한 규제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유엔 글로벌 탄소시장 규칙 합의로 모처럼 활기

오랜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글로벌 탄소시장에 대한 규칙이 합의되면서 향후 탄소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협상단은 유엔(UN)이 운영하는 글로벌 탄소시장 규정에 대해 최종합의했다. '제6.4조(국제탄소시장)'로 불리는 규정은 UN이 시장을 관리하는 중앙집권형태의 '크레딧 메커니즘(국제 배출권거래시장)'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제6.2조(협력적 접근법)'의 경우, 각 국가들이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국외감축실적(ITMO)을 발행,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이다.

진통을 겪던 제6.2조까지 합의됨에 따라, 미국의 베라(Verra)나 스위스의 골드 스탠더드(Glod Standard)와 같은 민간의 탄소 크레딧 등록소로 운영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리협정 제6조 합의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탄소시장에 대한 통합 기준 마련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COP29에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양자협약을 맺기도 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아세안은 역내 공동 탄소시장(ASEAN Common Carbon Framework, AACF) 구축을 위한 MOU에 서명했다. 싱가포르와 잠비아도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MOU를 맺었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에 따르면, 국외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국가는 일본(28개), 싱가포르(21개), 스위스(12개), 한국(10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일본정부는 GX(녹색전환) 추진법 개정을 목표로, 2025년 국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법적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2026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연간 10만톤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대기업 400여곳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EU는 ‘탄소 제거에 대한 EU 차원의 첫 인증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탄소제거인증프레임워크(CRCF) 도입안으로, 탄소제거 솔루션을 정량화하고, 모니터링하며, 검증하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그린워싱 방지 프레임워크 도입 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르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 또는 유기물 발생 탄소를 포집하는 영구 탄소 제거를 도입하거나, 목재 등 최소 35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제품에 탄소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재조림, 이탄지·습지 복원 등을 통해 숲과 토양에 탄소를 격리·저장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 농업 활동을 최소 5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CFTC)의 경우, 자발적 탄소시장 지침을 발표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크레딧 개발업체 CQC를 첫 단속했다. 수백만 개의 탄소상쇄 크레딧 허위 발급으로, 100만달러(약 13억원) 벌금과 크레딧 취소 조치가 취해졌다.

☞ [COP29, UN 주도 탄소배출권시장 메커니즘 합의](#)

☞ [국제 탄소시장 활짝...아시아 국가들이 움직인다](#)

☞ [일본 정부 400여개 자국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 의무화](#)

☞ [EU,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이사회 최종 승인](#)

☞ [CFTC, 자발적탄소시장 첫 단속...13억 벌금과 탄소 크레딧 취소 조치](#)

ESG의 S 이슈, 특히 기업 인권 관련 리스크 부각

ESG의 환경(E) 이슈에 이어, 소셜(S)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기였다. 지난 9월 23일, 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ISFD)가 공식 출범했다. TISFD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재무적 리스크로 다룬다., TCFD(기후변화)와 TNFD(자연자본) 이슈처럼 S(사회) 현안인 불평등을 다룰 공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2025년 말까지 프레임워크 베타 버전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과 금융기관에 적용해 평가한 뒤, 2026년 말 첫 번째 정식 버전을 발간할 예정이다.

TISFD 프레임워크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마찬가지로 TCFD 및 TNFD의 네 가지 기둥 구조(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매트릭스 및 목표)를 채택하되, 불평등과 사회적 영향의 특수성에 맞게 조정된다. TISFD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EU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ESRS)과의 일관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OECD, PRI, UNDP, WBCSD 등 100개 이상의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기업의 인권 관리는 CSDDD(공급망인권실사) 규제와 맞물리며 경영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 13곳의 인권 실사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가 최고점(51점)을 기록했지만, 90점 만점 기준으로 51점을 넘는 기업은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21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국의 BYD는 최하위(11점)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 기업

대부분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채굴과 같은 아동 노동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공급망 내 원주민 권리 인정 및 이행에서도 많은 기업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은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로 미국 상장이 실패한 데 이어, 런던 상장에서도 인권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쉬인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아동노동 사례 2건을 인정했지만, 노동권 보호를 강조하는 영국 정치권과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상장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동시에, 이탈리아 규제기관은 쉬인의 환경 관련 그린워싱 혐의 조사에 착수하며 상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미국 모기지 대출업체 페어웨이는 레드라이닝(Redlining) 혐의로 법무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부터 190만 달러의 벌금과 700만 달러의 대출 보조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앨라배마 주 흑인 거주 지역에 대한 차별적 대출 관행으로 지적받았으며, 흑인이 다수인 지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백인이 다수인 지역에만 마케팅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레드라이닝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하며, 차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 [TCFD, TNFD에 이은 TISFD, 불평등과 사회 다룬다...사회 공시 표준 나오나](#)

☞ [인권관리가 뭐길래...전기차기업 인권실사 평가 결과 공개, 역대 벌금에 상장 실패 위기도](#)

EU 규제 완화 움직임 시동, but ESG 평가기관 규제는 강화

EU에서는 제2기 EU집행위원장 임기가 시작(12월1일)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차기 집행위원회는 규제 간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노미 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이 완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는 EU가 경쟁력을 잃을 경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드라기 보고서의 일부 권고안을 수용하며, 여러 규제를 통합 개정하는 '옴니버스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규제 완화가 이뤄진 정책도 있다. 시행이 12개월 연기된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은 2025년 12월부터,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는 일부 EU 회원국과 기업들이 규정 준수에 필요한 지침을 명확히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EUDR 위반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4%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벌금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무역 담당자는 지리적 위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EU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한편,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는 EU와 영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ESG 평가기관 규제를 위한 신규 법안을 지난 11월 21일(현지시각) 승인했다. 이번 규제에 따라 EU 내 ESG 평가기관은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방법론과 정보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U 외부 평가기관도 EU에서 활동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ESM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사업 분리 원칙도 도입된다.

영국도 최근 금융행위감독청(FCA)을 통해 ESG 평가기관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EU와 영국의 규제는 ESG 평가의 글로벌 표준화를 향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EU, ESG 규제 간소화 추진... 경쟁력 논란 속 규제 완화 검토](#)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산림전용방지법에 12개월 연기 결정](#)

☞ [유럽연합도 ESG평가사 규제 나서...EU이사회 통과](#)

☞ [英, ESG 평가기관 규제안 윤곽 공개... 국내외 모든 기관 인가 받아야](#)

Editor's Comment

- 글로벌 탄소시장 규칙이 합의됨으로써,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그린워싱 이슈로 탄소크레딧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향후 탄소 제거에 대한 크레딧의 정량화와 검증,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움직임이 생겨날 전망이다.

- 트럼프의 등장과 EU의 ESG 백래시와 경제 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ESG 공시와 규제의 움직임이 계속될지 완화될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TCFD와 TNFD를 본뜬 소셜(Social) 버전의 프레임워크인 TISFD까지 출범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단, CSDDD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 내 공급망 인권에 관한 이슈는 계속 중요해지는 이슈일 수밖에 없다.

- 유럽연합은 지나친 ESG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ESG 규제 간소화 논의를 시작했다. EUDR 1년 연기와 함께, CBAM에 대한 비판도 EU 역내와 역외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논란은 있지만, ESG 평가기관 규제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글로벌 표준화를 촉진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보면, 결국 EU의 규제 또한 큰 물결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